

# “나라의 평화 위해 꼭”

###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민주 원로 정치인들,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고문단이 이재명후보 지원유세 나섰다.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장을 비롯해 정대철·정규환·김태랑 고문 등 총 20여명의 원로 정치인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평화와 민주주의는 국가 번영의 기본임에도

윤석열후보는 선제타격, 사드배치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촛불시 민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운운한 것은 정

치를 보복의 정치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상임고문과 고문단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시작으로 16일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17일 여주시, 남원시, 전주시, 18일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직접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대철·정규환·김태랑 고문 등 총 20여명의 원로 정치인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도내 5개 시군 LPG판매업자, 이재명 지지 선언 전북 5개 시군 LPG 판매업자들이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영유아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적극”

### 민주 안호영 의원, 도당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포함” 이재명 후보 아동공약 홍보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내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는 등 지방위적인 선거운동에 매진했다.

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이계순 회장 등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을 비롯해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희자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등 민간 아동보육시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영유아 보육은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분야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책임 강화 등 영유아 보육공약을 소개하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정책본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길 유능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전주시 화산체육관에 마련돼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체육시설 운영상황과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유호상 기자

## 이경신 전주시의원 “6차선 효천교 신호 체계 개선”

지난해 10월 개봉한 전주 효천교 신호등의 좌회전 금지에 따른 신호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17일 전주시의회 이경신(더불어민주당, 효재·2·3동)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효천교와 인근 주민들은 좌회전이 되지 않는 효천교 교차로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젠 행정편의주의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교량의 교통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효천교는 효천교와 삼천동 공동주택 밀집 구역을 오갈 수 있는 교량으로 지난해 10월 개봉했다. 다리는 길이 128m, 폭 36.5~43m의 왕복 6차선으로 상부 보행로는 숲길을 조성했고, 보도와 차도 사이는 녹지 띠를 만들고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했다.

이 의원은 “이런 효천교는 삼천천과 주변경관을 조망하고 휴식과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석이 동원됐지만, 실상은 주민이 원하는 곳을 연결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다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천교는 규모와 공사비,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교량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지만 불편한 남게 됐다”며 좌회전 신호가 가능한 구조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START’

###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오늘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20일부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지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관이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 작성 시 예비후보자후원회 명칭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거관에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 조성’

###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이재명 정책공약 연계 혁신성장 청사진 제시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를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로 혁신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주의 산업지형을 바꾸기 위해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과 뛰어난 정책공약으로 예산 규모를 키우고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위해 이재명, 전주니까 조지훈” 대선 승리 정책연계 공약으로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 1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주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계정 경제인 지원단 및 멘토단’ 조직, ‘고향 사랑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등이 핵심이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또 청년 디지털 실업자 1만 명, 한국형 휴먼 캐피탈 방식으로 디지털 전문가 2만 명 등 디지털 미래인재 3만 명을 육성해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지식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전주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보관리 최고책임자(CIO), 기술지원 최고책임자(CTO) 등 민·관·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디지털 산업 육성에 일반회계예산의 4%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제는 더욱 쇠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공약과 연계해 전주의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리고자 한다. 이는 전주의 백년대계가 될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7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이계순 회장 등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양영환 전주시의원 “평화1동 주민·남부청소년 동시 신축을”

넓고 협소한 전주시 평화동 주민센터를 완성여상 기부체납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다.

이날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준공된 지 28년이 지난 평화동주민센터는 인근 도로 교통량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지역거점 시설 역할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런 문제로 인해 해당 주민센터와 완성여상 기부체납부지에 신축 예정인 남부권청소년센터 위치를 맞바꾸자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청소년센터 부지가 완성여상 기부체납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센터 신축 문제는 기약이 없게 됐다”고 고집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주민센터와 남부권청소년센터를 완성여상 기부체납부지에 함께 신축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남부권청소년센터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해당 부지의 건축 가능 면적은 6,927㎡로 30억 원 가량의 공사비 조달만 가능하면 함께 신축할 수 있다. 그는 “재원 조달은 현 주민센터를 매각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전주시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 수제맥주산업 육성 협력 다짐

### 김수홍 의원, 수제맥주협회와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갑 회계재정위원회)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22회의실에서 한국수제맥주협회와의 정책협약식을 열고, 한국수제맥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선대위는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노력 ▲맥주 재료 범위의 확대를 포함한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재료를 대상으로 맥주 주종의 범위와 재료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됐다.

김수홍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들이 주류제조·판매업 소상공인”이라며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동부권 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계획안 승인

### 도의회 교육위 의안 심사... 순창 구림중 폐교부지에 조성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7일 기정 ‘7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 계획안’을 승인했다. 교육위원회는 도내 유아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재원의 효율적 관리 등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제38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회의를 열고,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퇴직을 앞둔 이은희 순창교육장과 이황근 고창교육장에게 그간의 소회 등을 묻고,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며, 격려와 감승의 말을 건넸다.

교육위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후 교

육감이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전반기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 그리고 폐지에 관한 주민의견제출권이 부여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교육위 강용구 의원(남원 제2선거구)의 ‘의견 제출주체인 주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관할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업무 최적화 일환으로 교원 인사관련

업무 일부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교육위 김종식 의원(군산 제2선거구) 등은 학교장 등의 의견수렴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정 ‘7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의 건으로 교육위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교육위 최영일 의원(순창군 선거구)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물론이고, 폐교부지를 적극 활용해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교육기반을 새롭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